

#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자기결정권 위한 보완 필요”

인권위, 과기부에 개선 권고  
생체인식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과정 전반 법적 근거 명확히 규정  
국민 대상 설명·정기점검 알려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의무화를 도입할 경우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얼굴 영상에서 추출되는 생체인식정보는 변경이 어려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해 유출 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생체인식정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시스

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등 생체인식정보 제공이 어렵거나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안면인증 외의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해야 한

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책 시행 이전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안면인증 기술의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본인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등 증서와 서류 제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생체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생체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 안면인증 방식이 명의자가 직접 개통 절차에 참여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나 법인 명의 우회 개통과 같은 유형의 대포폰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범죄와 무관한 다수 이용자에게 민감한 생체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공공서비스 이용, 모바일 신분확인 등 사회 전반의 필수 인프라로 기능하는 만큼 개통 과정에서의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AI 등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빅테크, AI칩 자체개발 확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회’

올해 ASIC 차지 비중 27.8% 전망  
TSMC, 수율 급증에 생산능력 부족  
퀄컴·AMD 등 삼성전자와 협상 진행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칩 경쟁이 격화되면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체 반도체 개발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생산능력이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주요 고객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체 개발한 AI반도체 ‘MTIA’ 시리즈의 신규 칩 4종을 공개했다. M

TIA 300·400·450·500으로 구성된 이 칩은 메타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MTIA 300은 이미 생산에 돌입했으며 나머지 3종은 추후 약 6개월 간격으로 생산해 내년까지 데이터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글 또한 지난 2015년 AI전용 칩인 텐서처리장치(TPU)를 공개했으며 아마존은 2018년 자체 AI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자체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고객에게도 자체 칩을 제공하며 AI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빅테크들의 자체칩 확대는 국내 메모리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가 범용 GPU 대신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주문

형반도체(ASIC)를 늘릴수록 여기에 탑재될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정교해지고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AI서버 시장에서 ASIC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칩 다극화 흐름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 개발을 확대하면서 첨단 공정 기반 파운드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있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TSMC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약 70%를 기록하며 1

위를 유지했다. 다만 최근 AI칩 수요가 급증하면서 첨단 공정 생산능력이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TSMC의 CC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도 지난해 AI반도체 수요 증가로 첨단 공정 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ASIC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파운드리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TSMC가 그간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와 안정적인 품질로 신뢰를 쌓아왔으나 최근 팹리스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납기 준수로 꼽히는 만큼 특정 파운드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삼성전자는 2나노(nm·10억분의 1m) 공정에서 기회를 파고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SMC를 제외하면 2나노 최첨단 공정 양산이 가능한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퀄컴과 AMD 역시 TSMC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삼성전자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20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선단 공정 수주 확대’를 파운드리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나노 공정 양산을 본격화하고 AI반도체 수주에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 GPU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AI칩을 개발하려는 빅테크가 늘고있다”며 “이 과정에서 AI 반도체 설계와 메모리, 파운드리까지 공급망이 다변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되고 주택연금 월 지급 늘었다

### 연금제도 ‘대수술’

국민연금, 보험료율 0.5%p 인상  
주택연금, 주택담보로 일정액 연금  
하반기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은퇴 후 소득을 책임지는 연금 제도가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주택연금은 신제도 도입으로 기존보다 보충료 부담이 줄고 수령액은 늘었다.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됐던 기초 연금은 축소가 논의된다.

### ◆ ‘국민연금’ 보장 확대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올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오

는 2033년에는 13%까지 오른다. 소득 대체율은 43%로 늘어난 만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늘어난다.

군 복무·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제도’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군 복무를 마치는 장병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둘째부터 인정됐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자녀마다 12개월씩 인정된다. 크레딧은 추후 평균 납입액과 총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액 산정 시 활용된다.

### ◆ ‘주택연금’ 지급액 늘어

주택연금은 이달 초부터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른 신제도를 도입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형 정책금융상품이다.

신제도 도입에 따라 주택연금은 향후

지급기간과 수익 구조를 산정하는 ‘계리모형’을 조정했다. 다만 새로운 계리모형은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이달 초부터 가입한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

###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대신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한해 적용된다. 기금형 도입 시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퇴직연금을 운용을 위탁할 수 있게 되며, 만기마다 상품을 재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자금유출 135억弗

### ▶▶ 1년 ‘코스피 발빠는 외국인…’서 계속

‘2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금 유출 규모는 135억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락했던 2020년 3월(110억4000만 달러)을 넘어선 수준이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더해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이탈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을 우려해 주식과 채권 등 국내 자산 비중을 줄일 경우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될 경우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 유출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환율 상승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유와 가스, 원자재 등 수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기업들이 원자재 구매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 예측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경영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